

한양대학교 도서관 사서 민복기(49)씨가 지난해말 학교를 상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여성단체와 사무직노조 여성간부들이 대응전략을 공동 모색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은 지난해 10월 이후 금융권의 여행원제 폐지로 법 시행 6년 만에 처음으로 여직원이 많은 사업장에서 이 조항이 실현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종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임금과 승진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10여개 사무직 노조의 여성간부들은 한국여성민우회(회장 한명숙) 주최로 27일 오후 민우회 교육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를 위한 사례발표 및 간담회'를 갖고 공동대응책, 앞으로의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사소송 계기 여성계 공동대응 모색 활발

여성민우회 사례발표회서 성차별 관행 타파방안 논의

간담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청구소송으로는 국내에서 세번째로 제기된 민씨의 소송 사례에 특히 관심이 집중됐다. 23년째 한양대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민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5일 학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원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민씨는 소장을 통해 "학교측에서 본인보다 1년 늦게 들어온 대졸 남자 사서를 12년 먼저 계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동일노동을 하는 남녀 사서의 승진과 임금에 각종 형태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 회복과 승진 보장을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소멸 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지난 3년 동안 비슷한 경력의 대졸 남자 사서보다 덜 받은 1천5백39만4천6백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오는 2월5일 2심재판이 열린다.

민씨 사례에 이어 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으로 병원측

을 고소한 부천세종병원 노동조합 사례도 발표돼 주목됐다.

부천세종병원 노동조합 신윤복(35) 위원장은 "지난해말 병원측을 단체협약·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한 것은 단체협약을 맺고도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동일직종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직원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 노동조합은 노동부 고소와 함께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한 상태이다.

한국여성개발원 김열림 책임연구원은 이날 논평에서 "성별 직종 분리가 남녀 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확산하기 위해선 노조의 단결력이 필요하므로 "꾸준한 토론을 통해 노동조합의 주류를 이루는 남성조합원들이 여성노동 문제에 공감대를 갖도록 노력할 것"을 권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또 노동부가 지난해 4월 동일노동 가치기준을 제시해 발표한 '남녀고용평등업무지침' 내용을 회시는 물론 여성들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사업장마다 임시직·촉탁직·시간제 고용 여성들이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대활동을 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연숙 기자

청와대에 여성노동정책 질의

여성노동자공동위 고용안정책 등도 촉구

93.3.5

전노협,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공동위원회는 4일 청와대에 '여성고용과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공동위원회는 질의서에서 "최근 들어 생산직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감원·해고, 사무직의 임시직 증가 등으로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이 심각한 상태며, 타아문제 해결, 모성보호 조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

성고용이 안정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등 10개 사항을 질의했다.

이른 시일 안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공동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 일터 보장을 위해 △임시직의 정규직화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 여성고용 의무할당제 20% 도입 △여성의 저임금 해소 △출산휴가 90일 보장 △직장탁아소 설치 의무화 △남녀 양성 평등교육 실시 등도 촉구했다.